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86
----------	------

발의연월일 : 2024. 12. 17.

발 의 자 : 이양수·서천호·이인선  
최형두·박덕흠·이종배  
조경태·김소희·정희용  
배준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와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는 상황임.

이에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이 어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어항을 어업 기반 시설 외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계적인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시설 및 어

항구역 내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어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검사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어항시설의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추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 나.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항배후지역’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 다. 어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구분함(안 제19조 및 제23조 등).
- 라. 어항의 기능 저해,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출입통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제46조의2 신설).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2)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부두”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건조장·수리장”을 “건조장·수리장·검사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부터 7)까지를 각각 4)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중전의 5)) 중 “생선횃집”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쇼핑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 3) 귀어업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5의2 “어항배후지역”이란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  
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  
하기 위하여 제17조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7조제4항 중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제17조제1항 중 “지정한다”를 “지정하며, 어항배후지역의 경우에는 방재(防災), 관광·레저, 수산물 유통 등 어항배후지역이 수행하는 특정기능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항 및 어항시설”을 “어항, 어항시설 및 어항배후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어항,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또는 어항배후지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를 “어촌관광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항구역”을 “어항구역(어항배후지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어항개발계획을”을 “어항개발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어항개발

계획”을 각각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어항개발계획수립”을 “어항개발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어항개발계획”을 각각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2조 중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허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어항개발계획”을 “어항

개발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을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지정권자가 고시한다.

제24조제5항 중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제2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국가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촌정주어항”을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를 “전문인력, 기술·장비 등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자에게는”을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나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자재 창고 등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9. 허가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10.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출입통제)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중 “제8호”를 “제9호까지 또는 제11호”로 한다.

제6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

④ 법 제45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받지 아니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5. ----- ----- ----- ----- ----- ----- ----- ----- -----.
가. 기본시설	가.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2) -----소형선부두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나. 기능시설

1) · 2) (생략)

3) 어선 건조장 · 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  
· 수리장, 선양시설, 야적  
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 ·  
어구 보전시설

4) ~ 11) (생략)

다. 어항편익시설

1) · 2) (생략)

<신설>

3) · 4) (생략)

5) 지역특산물 판매장, 생  
선횃집 등 관광객 이용시  
설

6) · 7) (생략)

라. (생략)

<신설>

나. -----

1) · 2) (현행과 같음)

3) -----건조장 · 수리장 ·  
검사장-----  
-----  
-----

4) ~ 11) (현행과 같음)

다. -----

1) · 2) (현행과 같음)

3) 귀어업인 및 외국인근  
로자 등 수산업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4) · 5) (현행 3) 및 4)와  
같음)

6) -----휴  
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  
점 및 쇼핑센터-----  
-----

7) · 8) (현행 6) 및 7)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5의2 “어항배후지역”이란 어항  
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  
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  
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  
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p>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u>어항개발계획</u>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 라. (생략)</p> <p>7. ~ 10. (생략)</p> <p>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p> <p>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9조에 따른 <u>어항개발계획</u>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p>	<p><u>제17조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u></p> <p>6. ----- -----<u>어항개발기본계획</u>-----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7. ~ 10. (현행과 같음)</p> <p>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어항개발기본계획</u>-----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 ----- ----- ----- ----- ----- -----</p>
---	--

· 승인 · 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승인 · 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 17. (생략)

<신설>

제17조(어항 등의 지정 · 변경 및

-----  
-----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 · 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 17. (현행과 같음)

1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제17조(어항 등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

항해) ① -----  
-----  
-----  
-----  
-----지정하  
며, 어항배후지역의 경우에는  
방재(防災), 관광·레저, 수산물  
유통 등 어항배후지역이 수행  
하는 특정 기능 및 구역을 정  
하여 지정한다.

② -----어항, 어항시  
설 및 어항배후지역-----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어항,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또는 어항배후  
지역-----  
-----  
-----.

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①  
-----  
-----어  
항구역(어항배후지역을 포함한  
다)-----

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어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어항개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  
-----  
-----  
-----  
-----  
-----  
-----

-----어항개발기본계획-----.

② -----어항개발기본계획-----

-----어항개발기본계획-----  
-----.



1. ~ 5. (생략)

③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화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1. ~ 5. (현행과 같음)

③ -----  
-----어항개발  
기본계획-----  
-----  
-----  
-----어항개발기본계획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어항개발기본계획  
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어항개발기본계획-----  
-----  
-----  
-----  
-----.

⑥ -----어항개발기본계획  
-----  
-----  
-----  
-----.

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  
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약)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협의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은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  
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제20조(어항개발기본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기본계획-----  
-----.

1. ~ 6. (현행과 같음)

제21조(어항개발기본계획수립 등  
의 협약) ① -----어항  
개발기본계획-----  
-----  
-----  
-----  
-----  
-----  
-----  
-----  
-----  
-----  
-----  
-----.

② -----  
-----어항개발  
기본계획-----  
-----  
-----  
-----.

다.

③ (생 략)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생 략)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보강 공사 중 다음 각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어항개발기본계획-----  
-----  
-----  
-----  
-----  
-----  
-----  
-----  
-----  
-----.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  
-----  
-----  
-----.

1.·2. (현행과 같음)

③ -----  
-----  
-----  
-----  
-----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지정권자가 고시한다.

⑤ -----  
-----승인-----  
-----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생략)

②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

-----  
-----  
-----.  
-----  
-----  
-----.

⑥ -----어항개발기본계획-----.

⑦ -----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  
-----  
-----.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어항개발기본계획-----.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  
-----

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양여)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  
공단체 또는 제23조에 따라 어  
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  
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  
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양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23조-----  
-----  
-----.  
-----  
-----  
-----  
-----  
-----  
-----  
-----.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3.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④ (생략)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③ -----  
-----  
-----  
-----  
-----  
-----.

1.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

2. -----  
-----국가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

3.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  
-----.

1. -----  
-----시장.

군수

2. (생략)

② (생략)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 ⑤ (생략)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 ④ (생략)

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⑥ ~ ⑪ (생략)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생

군수·구청장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전문인력, 기술·장비 등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어항개발기본계획-----  
-----  
-----.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현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제45조(금지 행위) 누구든지 정당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  
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  
난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  
과하지 못한다.

③ -----  
-----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  
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는-----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  
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나 연체료  
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금지 행위) -----

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8. (생략)

<신설>

-----  
-----  
-----  
-----.

1. ~ 7. (현행과 같음)

8. 기자재 창고 등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른 기능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9. 허가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10.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46조의2(출입통제)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제60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영향을 받는 장소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9호까지 또는

<p>다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5. ~ 7. (생략)</p> <p>제62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③ (생략)</p> <p><u>&lt;신설&gt;</u></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u>제11호</u>-----</p> <p>-----</p> <p>-----</p> <p>-----</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6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u></p> <p>③ (현행과 같음)</p> <p><u>④ 법 제45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받지 아니한 취사·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u>⑤ -----제4항</u>-----</p> <p>-----</p> <p>-----</p> <p>-----.</p>
---	---